

안철수 “유승민·나경원 출마를”...홍준표 “배신 경력자는 가라”

국민의힘 당권 경쟁 본격화

김기현 “安 대선 불출마 선언 기대” 역선택 방지 조항 등 전대 룰 논쟁 당원 반영 비유·컷오프 도입 논란

국민의힘 차기 당권에 도전하는 주자들 간 신경전이 시작했다. 정기 국회 회기가 두 달 가량 남아 본격적인 전당대회 논의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잠재적 주자군 간 신경전은 물론 전대 룰을 둘러싼 논란마저 조기 점화할 조짐을 보인다.

당권 주자들은 11일 서로 실명을 거론하며 출마와 불출마를 중용했다.

일찌감치 당권 도전을 선언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유승민, 나경원 두 분 모두 출마하시기를 희망한다”며 “세 명의 출마로 국민과 당원들께 총선 승리를 위한 최선의 선택지가 무엇일지를 묻는 전당대회가 되어야 한다”고 썼다.

후보군 중 자신과 함께 대중적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두 후보를 거명하면서, 이들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인다.

전대 경쟁자 김기현 의원은 “대선 주자는 전대에 나오면 안 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대담으로도 해석된다.

김 의원은 이날 안 의원의 언급에 대해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역량있는 후보들의 한판 승부를 통해 당을 보다 활력있게 발전시켜 나갔으면 한다”며 호응하면서도 “총선승리라는 지상목표를 공유하고 계신 안철수 의원의 대선 불출마 선언도 기대하겠다”며 재차 압박했다.

당내 기반에 비해 대중적 인지도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김 의원이 안철수·유승민 등 잠재적 대권 주자들의 당권 도전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에 “배신 경력 있는 사람은 가라. 이미징 정치인은 더 이상 나오지 마라. 소신 없는 수양버들은 가라”고 썼다.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나경원 전 의원을 싸잡아 비판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홍 시장의 글이 김기현 의원 지지와 ‘함수 관계’가 있는지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전대 룰”도 벌써 논란거리다.

여론조사에서 다른 당 지지자의 선택을 막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고 주자 간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작년 당 대표 선거 때 역선택 방지조항을 뒀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는 것”이라며 도입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나 전 의원으로서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의원 역시 역선택 방지 조항에 찬성하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결코 받을 수 없는 조건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의 한 관계자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면 유 전 의원이 전대에 출마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최근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당 대표 적합도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기사를 SNS에 올리면서 역선택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바 있다.

해당 기사에는 “일각에선 유 전 의원의 선전이 역선택으로 보기만은 어려운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는 대목도 있다.

이날 유 전 의원의 출마를 촉구한 안 전 의원의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에 부정적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밖에도 당원 및 여론조사 반영 비율과 예비 경선(컷오프) 등의 룰을 도입할지도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6·11 전대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는 30% 비율의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목표를 받아 당원 투표(70%)에서 1위를 차지한 나경원 전 의원을 꺾고 당선된 바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11일 오전 나주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을 비롯한 피감기관 대표들이 선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연료비 급등” vs “탈원전 탓”...30조원 적자 원인 공방

국감 현장 - 한전

“핵심사업 매각 바람직하지 않아”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등 질타 한전KDN YTN 지분 매각 찬반

3년 만에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에서 11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올해 30조원이 넘는 것으로 예상되는 한전 적자 원인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한전이 올해 상반기 적자만 14조3000억원을 넘겨 역대 최대를 경신하고, 연간 적자는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강조하며 적자 원인에 대한 질의를 퍼부었다.

양극화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전기료 인상 문제가 30조 적자 위기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승일 사장은 “국내 전력 도매시장에서 1KWh 당 전기요금 가격(SMP·계통한계가격)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며 “한전 적자에는 연료비 급등에 따른 외부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고 해명했다.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산 매각에 대한 적절성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채 기준으로 해서 한전이 우수한 해외 사업을 매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는 한전을 민영화하기 위한, 한전 지분과 자산을 민간에 팔기 위한 포석”이라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전은 필리핀 현지 전력회사(SPC)와 필리핀세부석탄화력발전소 매각을 추진 중이다.

정 사장은 “핵심역량과 관련 있는 사업을 매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해외 석탄발전의 경우 신규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해외사업 매각은 자산 재배분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나주에 본사를 둔 한전KDN의 YTN 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여야 찬반이 엇갈렸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김장현 한전KDN 사장에 YTN 지분 매각 의향을 묻자 김 사장은 “YTN은 한전KDN의 고유 업무와 관련이 없다”며 매각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에 “한전 KDN 정관에 대충 방송사업이 있다”고 지적하자 김 사장은 “정관상 방송사업이라 함은 방송용 통신기 시설이나 설치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권이 바뀌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축소하는 한전 발전자회사들의 문제가 꼬집었다.

이용민 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은 “한전 발전자회사 등이 재정건전화계획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축소, 삭감하면서 전남이 다른 지역보다 가장 크게 피해를 보게 됐다”며 “전남 입장에서 예상 투자금 4640억원이 공중에 사라지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전의 방만 경영과 불공정 거래 등이 현재의 적자 상황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원들의 공세도 쏟아졌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전5개사가 8개 민간 발전정비업체에 발주한 발전정비공사 도급계약은 1조422억원 규모로, 한 업체는 전체의 3분의 1을 수주했다”며 “이 회사에 최근 5년간 재취업한 발전사 임직원은 총 13명이다. ‘일감 몰아주기’에 ‘내부거래’까지 발전 5사의 불법 하도급 백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한국전력이 도서지역 전력 공급 사업을 27년간 한전 퇴직자 단체의 자회사인 ‘JBC’ (구 전우실업주식회사)에 맡겨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재 민주당 의원(여수)은 한전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제거등을 승인받고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발생한 원전 정지 사고가 150건에 달한다고 꼬집었고, 양향자 무소속 의원(광주 서구을)은 한국전력거래소 고위 간부가 부하 직원 영영이를 때리고 폭언·협박한 ‘직장 내 괴롭힘’이 적발됐음에도 정직 1개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대통령실, 北 재래식 국지 도발 가능성 대비

충돌시 현장 즉각 대응 원칙

대통령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7차 핵실험뿐 아니라 재래식 국지 도발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핵실험 말고 성동격서식의 기타 도발도 진지하게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북한의 행태를 보면 예상 밖의 지역과 장소, 시간에 도발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런 차원에서 대비 태세를 체크해야 하고, 실제로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통화에서 “북한이 재래식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최근 들어 국지 도발에 대한 우려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이 지난 6일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를 동원해 평택 비행과 공대지 사격 훈련을 벌인 데 이어, 8일에는 전투기 150대로 대규모 항공 공격 종합훈련에 나서면서 이 같은 우려는 갈수록 깊어지는 분위기다.

추가 핵실험이 연초부터 제기된 리스크라는 점에서 북한이 일종의 ‘충격 요법’으로 우리 군을 직접 겨냥한 전술 도발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지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압도적 화력으로 북한 도발을 제압,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확실히 보호하겠다는 것이 현 안보 라인의 방침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문답에서도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 대응 기조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제22회 곡성삼육

어린이 대축제

아이에게 선물하는 특별한 하루

2022.10.27. - 30. 일

곡성삼진강기차마을